

그림1. 보건복지부 원격의료 홍보 리플렛

이제 그런 핑계대지마

2014.06.26 | 이은경_새사연 연구원 | eundust@saesayon.org

의료비 폭등과 엄청난 환자 부담이 예견되는 의료민영화. 박근혜 정부는 그러한 의료민영화를 “취약계층에 도움이 된다” 는 미사여구로 포장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의료민영화는 취약계층 의료비 부담에 직격탄이 될 것이며 “그들” 에게 취약계층은 선거와 정책 추진 시기의 배경사진 정도에 불과하다. 차라리 “우리는 부자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추진한다”, “취약계층은 고려대상이 아니라” 라고 솔직하게 커밍아웃을 하는 편이 낫지 않을까.

그렇고 그런 이야기들

이야기는 항상 똑같다. 선거 때마다 정치인들은 시장에 가서 어묵을 먹고, 복지시설에 가서 밥을 나눠주고, 거리에 나가 청소를 한다. 정부는 언제나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해 정책을 추진한다고 말한다. 아니나 다를까, 박근혜 정부 역시 원격의료를 장애인과 어르신, 의료소외지역 주민을 위해 추진한다고 홍보 중에 있다. 의료기관 부대사업에도 취약계층을 위한 장애인 보조구 사업이 추가되어 있다.¹⁾

의료취약계층을 위해 의료민영화를 하고, 장애인과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원격의료를 한다. 영리자회사는 경영난에 시달리는 중소병원을 위한 선의의 정책이며, 항상 포커스는 취약계층이다. 참으로 훌륭한 정부가 아닌가?

1) 환자의 신체 특성별로 맞춤형 제작·수리가 필요한 장애인 보장구 등(의수·의족, 전동휠체어 등)의 맞춤형 제조·개조수리를 신설함

**원격의료,
병원에 가기 힘든 분들의
건강도 챙겨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거동이 어려운 어르신,
혼자 몸을 가누기 어려운 장애인,
오랜 시간 버스나 배를 타야하는 섬마을, 산골마을 주민들,
의사 만나기가 참 힘듭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어떤 곳에 살더라도
필요할 때 의사를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부는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의료에서 소외받지 않도록
원격의료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 원격의료는 **의료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노력입니다.



섬, 산간 지역 등 병원을 이용하기 어려운 곳 주민, 거동이 불편한 환자나 어르신
이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아바위, 당의정 같은 정부 정책

7-80년대를 그리는 드라마를 보면 “돈 놓고 돈 먹기” 운운하며 사기그릇을 얹어놓고 아바위 내기를 벌이는 판을 볼 수 있다. 또한 쓴 약을 먹기 싫어하는 아이들에게 설탕을 입힌 약인 ‘당의정’을 주는 모습도 흔히 등장하는 장면 중 하나다. 최근 정부의 의료정책 관련 홍보활동들을 보며 이러한 드라마 장면이 연상되는 것은 왜일까?



과연 취약계층은 누구인가?

취약계층은 정의하기가 어렵다. 빈곤층, 장애인, 사회적 약자, 아동·여성·노인 등 범주도, 취약한 영역도 다르다. 2012년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에 보고한 보고서는 취약계층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취업활동과 생애과정에서 부딪히게 되는 각종 사회경제적 위협에 (현재)노출되어 있거나 노출될 위험성이 높아 정책적 지원과 사회적 보호가 없을 경우 (미래)빈곤층으로 전락하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계층을 지칭한다.... ‘취약계층’은 결과적인 사회경제적 상태(빈곤, 사망 등)를 지칭하기 보다는 그러한 결과에 놓이게 될 과정적 위험성이 높아 정책적 지원과 개인이 필요한 계층을 지칭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취약계층의 정의에는 (1) 개인적 속성이나 사회적 위치 (attributes & position), (2) 사고(event & accident), (3) 생애과정(life-course) 등의 차원이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정의되어야 하며 그에 맞게 정책수단들도 명시적으로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²⁾

즉 취약계층이란, 현재의 상태에 집중하기 보다는 개인적 특성(유전적, 개인 능력의 차이), 사회경제적 위치, 불운, 생애과정(아동과 여성, 노인은 상대적으로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등에서 위협에 처하기 쉬운 계층을 의미한다. 위의 보고서대로라면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각각의 차원에 따라 각각 다른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소득정책이, 건강상의 측면에서는 보건의료 정책이, 여성이거나 노인이라는 생애주기별 위협의 관점에서는 여성-노동-가정정책과 같이 각각 그에 맞는 대책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보건의료에서 취약계층과 그를 위한 정책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보건의료에서 취약계층이란 ▲경제적 이유나 거동 불편, 지리적 접근성 때문에 의료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있는 사람들과 ▲질병에 걸릴 위험률이 높은 사람들, ▲건강상의 취약으로 취업이나 일상생활에서 불평등에 직면하는 사람들이 포함될 수 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피비우스의 띠

아마티아 쉐의 역량이론에서 핵심은 “건강” 이듯, 건강은 모든 취약계층의 원인이며 결과이다. “장애는 빈곤의 절친한 친구”라는 말에서도 그 일단을 살펴볼 수 있다. 장애와 질병이 있으면 빈곤해지기 쉽고, 역으로 가난하면 아프기 쉽다. 어려운 이론을 찾지 않더라도 이 같은 사실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일들이다. 저소득층은

2) 방하남(노동연구원), 강신욱(보건사회연구원), 취약계층의 객관적 정의 및 고용과 복지를 위한 정책방안,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2012.1

건강에 좋은 정보도,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능력도 없다. 열악한 주거환경과 취약한 먹을거리는 건강을 악화시키고, 병이 나도 경제적 이유로 쉽게 치료받지 못해 가벼운 병이 심각한 중병으로 악화되기 일쑤다. 비정규직과 워킹푸어들은 노동조건이 취약한데다 집도 멀리 있어, 출퇴근길과 직장에서 병을 키운다. 그러다가 병이 본격화되면 질병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게 되고, 줄어든 소득은 병을 악화시키는 또 다른 원인이 된다.

이와 정반대로 부유층은 돈이 많을 뿐 아니라 건강하기까지 하다. 건강은 아프면 불편한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기본 능력이다. 건강한 몸과 마음은 학업, 취업, 직장생활, 사회생활, 가정생활 모두를 가능케 하는 가장 기본적인 역량이다. 건강이 불평등해지면 이런 모든 일에서 뒤쳐진다. 일생이 불평등해 지는 원인 중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바로 건강불평등이다.

이렇게 피비우스의 띠처럼 반복되는 현상을 ‘빈곤의 띠’이라고 부른다. 이와 같은 띠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각각의 상황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 소득에 관계없이 좋은 주거환경과 먹을거리,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제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 건강상 취약해지기 쉬운 아동·여성·노인층에 집중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질병과 장애가 발생하면 소득과 관계없이 치료와 재활을 받을 수 있는 여건과 질병으로 줄어든 소득 보장의 환경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다음은 건강취약 계층을 범주화하고 핵심 정책대안을 정리한 표이다.

표1. 건강취약계층과 그 대책

범주	현황	정책대안
의료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있는 사람들	경제적 이유 : 의료비 과부담계층	건강보험 보장강화
	장애·질병으로 의료이용 장애	이동권 보장 방문서비스
	지리적 접근성	지역(동네)병의원 주치의제도
질병에 걸릴 위험률이 높은 사람들	아동, 여성, 노인 등	생애주기별 보건의료서비스 강화
건강 취약으로 취업이나 일상생활에서 불평등에 직면하는 사람들	장애·질병으로 인한 실업과 생계유지 곤란	상병수당 차별문화 폐지

이 연계 고리에 의료민영화가 끼어들 틈은 없다. 의료민영화는 취약계층에게 직격탄이 될 것이 때문이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취약계층에게 직격탄이 될 의료민영화

정부의 말대로 원격의료와 부대사업이 확대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먼저 원격의료를 위해서는 의료기관과 연결할 수 있는 네트워크 기기 말고도 생체신호를 측정할 수 있는 진단기기와 이를 측정할 수 있는 능력이 같이 보장되어야 한다. 결국 돈과 사람이다. 정부는 모니터와 휴대폰만으로 원격의료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렇게 될 경우, 엄청나게 위험한 진료가 남발된다. 결국 정부의 말과는 다르게 돈을 내고 기기를 전부 구입하거나, 안전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병원에서 판매하는 장애보조기구들 역시 질은 좋을지 모르나 그 대신 엄청나게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한다. 병원에서 헬스장을 짓고, 수영장을 만들면 명의선생님이 권고하는 아쿠아로빅과 건강프로그램을 받으며, 명품재활기기를 사용할 '재력이 뒷받침 되는' 환자들만 이용 가능한 병원이 된다. 반면, 보다 편하게 방문하여 바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저렴한 공공병원 및 동네병원은 점차 사라지고 있다. 진주의료원 폐쇄로 장애인 산부인과와 장애인 치과가 없어진 것은 그 신호탄이다. 이미 상당수의 공공병원이 산중턱, 고속도로 옆, 허허벌판 등 가기조차 어려운 곳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유는 단 하나,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이다.

동네병원은 임대업을 허용해 줘, 병상을 줄이고 임대업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생겼다. 그러나 그나마도 투자하기 어려운 영세한 병의원은 원격의료가 본격화되면 살아남을 수도 없게 된다. 그 결과 값 비싼 수도권 대형병원만이 남게 되고, 그런 병원에 가려면 엄청난 돈이 필요해진다. 자주 병원을 이용해야 하는 건강취약계층은 자연히 건강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시나리오는 이미 현실이다.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전년도보다 생활비가 오른 장애인가구는 72%나 되는데, 그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의료이용, 장애보조기구, 요양간병비 등 전부 의료관련 비용이다. 또한 장애인의 70.0%가 자신의 장애상태와 관련이 있거나 장애 외의 다양한 만성질환을 앓고 있고 72.4%가 정기적 진료를 받고 있어 의료수요 역시 매우 높다. 하지만 18.9%가 최근 1년간 본인이 병의원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경험이 있었고, 가지 못한 이유로는 경제적인 이유가 58.7%에 달했다.

가구 의료비가 가구총소득의 10% 이상으로 의료비가 과부담인 가구 비율은 2008년 상반기 13.63%, 2008년 하반기 14.80%, 2009년 상반기 14.63%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저소득층으로, 전체 소득 중에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하위 20%가 제일 크다. 미충족의료와 당뇨환자 비율, 장애등급 보유자 역시 저소득층에 집중되어 있다. 의료비 지출역시 증가율의 감소는 의료급여 환자에게서 두드러진다. 필요의료

서비스 미치료를 또한 소득수준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낮은 소득계층에서 상대적으로 경제적 이유에 의한 미치료율이 높게 나타난다.

이런 상황에서 의료비 폭등과 의료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의료민영화 정책을 '취약계층을 위해서'라며 사탕발림 하는 것은 사기에 준하는 정부 행정 권력의 폭거이다. 국민이라면 어느 누구나 평등하게 건강으로 가난해지지도 않아야 하고, 가난하다고 건강이 나빠지지도 않아야 한다. 이를 지켜주는 것이 국가이다. 경제성장이며 산업 발달과 같은 이야기는 앞서 말한 최소한의 울타리부터 보장해주고 난 연후에 논의되어야 할 것들이다. 경제성장만이 정부의 역할이 아니며, 의료민영화로 경제가 성장하지도 않는다. 정부는 이제 그만 의료민영화의 헛된 꿈을 버려야 할 때이다. ▶

2014년 새사연 발간 보고서

2014년 6월 26일 현재

아젠다	발간일	제목	작성자
세계경제	1/15	지뢰밭 속 순항?	정태인
한국경제①	1/16	스스로 지뢰밭을 만들고 있는 박근혜 정부	정태인
한국경제②	1/17	747에서 474로 갈아탄 근해노믹스	여경훈
복지①	1/20	박근혜 정부식 보건의료, 민영화 폭탄	이은경
들봄	1/21	진정한 '국가 책임 보육' 이 되려면	최정은
주거	1/24	주택시장 죽이기에 골몰하는 정부, 어찌 하오리까	강세진
노동	1/28	사라진 공약, 반복되는 노동시장 문제들	김수현
복지②	1/29	노인, 대학생, 취약계층 복지 정책 실종	이은경
노동	4/14	청년일자리정책, 새 방향에 답 있다.	김수현 강세진 최정은
노동	4/17	청년들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 는 무엇인가?	김수현 강세진 최정은
노동	4/21	서울 청년일자리정책 새 방향 제안	김수현 강세진 최정은
주거	5/12	노인복지의 주요 이슈, 주거	강세진
경제	5/19	피케티의 "21세기 자본" , 그리고 한국 경제 ①	정태인
정치	5/22	민주주의의 수호자는 누구인가	이은경
경제	5/26	피케티의 "21세기 자본" , 그리고 한국 경제 ②	정태인
노동	6/2	노동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	이은경
경제	6/5	도시가계의 지출구조 진단 ①	강세진
경제	6/16	도시가계의 지출구조 진단 ②	강세진
복지	6/17	박근혜 2기 개각, 복지축소와 민영화의 신호탄?	이은경
경제	6/19	대기업 지원정책으로 전락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이상호
의료	6/23	박근혜 정부의 독주에 브레이크를	이은경
의료	6/26	이제 그런 핑계 대지마	이은경